

한계 드러낸 광주 유해물질 측정 시스템 개선 시급

금호타이어 화재가 준 교훈

금호타이어 광주공장 화재를 계기로 대형 재난 시 유해물질 측정과 관련 시민들의 혼선을 줄이고 실효성을 높일 지자체·국가 차원의 매뉴얼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이번 화재로 광주시와 영산강유역환경청, 보건환경연구원 등 기관들의 무신경함과 무책임, 소극적인 업무 행태가 고스란히 드러났다는 점에서 지역민들이 믿을 수 있는 유해물질 모니터링 시스템과 컨트롤타워 구축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앞서, 광주시는 '매뉴얼이 없다'며 화재가 난 뒤 나흘 뒤야 중금속 검출 여부를 측정하는가 하면, 화재 전후의 오염물질 검출 여부를 비교할 자료조차 확보하지 못하는 등 부실한 재난 대응 실태를 드러내 비판이 제기된 바 있다.

27일 광주시 등에 따르면 광주시와 영산강유역환경청 등은 이번 금호타이어 화재와 관련, 대책 과정에서 기관마다 다른 기준으로 대기오염여부를

지역민들 건강·대기환경 영향 주는 핵심 중금속 측정 매뉴얼 없어 기관별로 제각각 조사에 선별적인 정보 제공으로 혼선·불신 야기 시민 눈높이 고려 지자체·국가 차원 실효성 높일 매뉴얼 마련해야

측정, 발표하면서 시민들에게 혼선을 부추겼다는 지적을 받았다.

광주시 보건환경연구원의 경우 화재가 발생한 17일부터 이동식 측정차량 1대를 투입해 아황산가스, 이산화질소, 오존, 일산화탄소, 미세먼지, 초미세먼지 등 6개 항목을 1시간 단위로 실시간 모니터링했다. 연구원은 또 20일부터는 중금속 등을 측정한다며 VOCs 27종을 수동 포집 방식으로 채취했다.

연구원은 송정역·광산구청·어린이집 등 다중이용 시설에서는 벤젠, 에틸벤젠, 톨루엔, 자일렌, 스티렌 등 VOCs 5종과 포름알데하이드 등 6종도 측정했고 19-26일 사이에는 '약취 조사'를 내세워 9개

지점에서 VOCs를 비롯한 23개 물질을 측정했다.

영산강유역환경청도 이황화탄소, 산화에틸렌, 벤젠, 황화수소 등 휘발성유기화합물(VOCs) 59종을 측정했다.

연구원, 영산강청이 같은 휘발성유기화합물을 제 각각 측정하는가 하면, 장소도 임의적으로 선정한 뒤 측정해 공개했다.

측정 결과에 대한 판단도 제각각이었다. 연구원은 광주시 조례로 정한 '시 대기환경기준'을 적용했는데, 영산강환경청은 대기오염 평가 지표로 쓸 수 없는 'TWA(시간가중평균노출기준)'를 썼다.

연구원은 또 다중이용시설 조사 과정에서는 난데없이 '신축 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 관리 기준'을 적용

용해 판단했다.

가이드라인이 없다 보니 오염도 측정이 '긴급 측정' 위주로 이뤄지고, 현장에서 각 부서가 자체 판단해 측정을 하면서 정보의 혼란이 심해졌다는 얘기가.

이 과정에서 시민들에게 왜 그 기준을 적용했는지 여부나 측정 검출 수치를 어떻게 평가해야 하는지에 대한 설명도 없었다. 오히려 기준치를 벗어난 수치를 누락하거나 제 멋대로 해석해 공개하면서 왜곡된 해석을 불러왔다.

광주시 안팎에서는 "측정치를 비교할 만한 과거 데이터나 판단 기준, 매뉴얼이 하나도 없어 대처가 어려웠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실내 공기질, 중금속 등 측정이 금호타이어 화재가 '완전'된 뒤에야 시작된 것도 매뉴얼 부재로 어떻게 대처할 지 몰라 우왕좌왕하다 늦어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광주환경운동연합도 "광주시, 광산구, 영산강유역환경청, 광주고용노동청 등 각 기관이 협조하지 않고 개별적으로 대응하면서 일관성

있는 대책 추진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꼬집었다.

전문가들은 이같은 점을 들어 대형 화재, 화학 사고 등에 대응하기 위한 매뉴얼과 일관된 기준을 신설해야 한다는 지적을 내놓고 있다.

이철갑 조선대 작업환경의학과장은 "국민환경기초조사 결과나 국립환경과학원이 과거 유사 화재사고 당시 진행했던 피해 분석, 현상 진단, 원인 규명 연구들을 바탕으로 새로운 기준을 마련하는 것은 충분히 가능하다"며 "환경오염물질에 대한 측정된 연구결과 등 자료들을 종합해 국민 건강 보호를 위한 환경보건 감시체계 개편과 화학물질 위해성 평가 및 관리체계 구축에 나서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광주환경운동연합은 이날 성명을 내고 "정부와 관계기관은 대형 화재와 화학물질 노출에 대비하는 통합적 대응체계 구축을 위한 거버넌스를 구축해야 하며, 피해자들을 위한 체계적인 건강 영향 조사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진아 기자 jinggi@kwangju.co.kr

임금 체불 서광주청연요양병원장 구속

근로자 228명에 29억원 미지급

서광주청연요양병원장이 임금체불로 구속됐다.

광주지방고용노동청은 27일 서광주청연요양병원장 A씨를 근로기준법·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A씨는 요양병원에 근무하던 근로자 228명에게 임금과 퇴직금을 합쳐 29억 6000여만원을 체불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요양병원을 운영하다 폐업을 결정하고도 직원들에게 이를 숨기고, 폐업 직전까지도 근로자들을 채용하다 사전 예고 없이 요양병원을 폐업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지난 2021년에도 근로자 70명에게 13억

원의 임금을 체불해 벌금형을 선고받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A씨는 지난해 6월 25일 요양병원 폐업에 앞서 임원환자들을 다른 병원으로 전원 조치하려 다 환자·보호자에게 공지하는 절차를 누락한 혐의(의료법 위반)로 입건돼 검찰에 송치됐다.

서광주청연요양병원은 지난 2020년 광주 청연메디컬그룹의 경영난으로 법인회생절차(법정관리)를 밟아 오다 지난해 7월 폐업했다.

광주지방고용청 관계자는 "A씨는 폐업 당일 본인 계좌로 1500만원을 입금하면서도, 직원들 임금은 국가로부터 받은 대지급금으로 해결하려 하고 청산 노력을 보이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김진아 기자 jinggi@kwangju.co.kr



오월영령 혼 달래는 5·18 부활제

5·18 최후 항쟁일인 27일 오후 옛 전남도청앞에서 열린 45주년 민중항쟁 부활제에서 오월영령의 혼을 달래주는 살풀이 공연이 열리고 있다.

/나명주기자mjna@kwangju.co.kr

경찰, 내란 혐의 한덕수·최상목 출국 금지

이상민 전 장관도 기간 연장

경찰이 내란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등에 대한 출국금지를 확대하는 등 수사 속도를 높이고 있다. 경찰 안팎에서는 이들 중 일부에 대한 신병 확보 가능성까지 거론되고 있다.

경찰 특별수사단은 한 전 총리와 최 전 부총리를 이달 중순께 출국금지했다고 27일 밝혔다. 지난해 말 출금 조치가 내려졌던 이 전 장관에 대해서도 금지 기간을 연장했다고 전했다.

전날 이들 '3인방'을 불러 10시간 안팎의 조사를 벌인 경찰은 계엄을 인정한 계기와 계엄 관련 문건을 수령한 과정 등에 대한 이들의 진술을 분석해 대통령경호처로부터 확보한 국무회의장 내부 등의 폐쇄회로(CC)TV 영상과 대조하고 있다.

한 전 총리의 경우 지난 2월 6일 국회 청문회에 출석해 "선포 당시 (비상계엄 관련 문서를) 전혀 인지 못 했고, 계엄 해제 국무회의를 마치고 사무실로 출근해 양복 뒷주머니에 있는 것을 알았다"고 증언한 바 있다.

최 전 부총리와 이 전 장관도 경찰에서 기존 입장과 크게 다르지 않은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누군가 적힌 쪽지 형태로 (계엄) 자료를 줬다", "달아놓자고 하고 보지는 않았다"는 최 전 부총리와 "(집무실에서) 종이쪽지 몇 개를 밀러서 봤는데, 소방청 단전, 단수 등 내용이 적혀 있었다"는 이 전 장관의 주장에 대해 신빙성을 의심하고 있다. 경찰은 전날 조사 내용을 분석한 뒤 추가 소환을 비롯한 향후 수사 방향을 검토할 방침이다.

/연합뉴스

초과근무 수당 부당 수령 여수시 공무원들 수사

여수시 공무원들의 초과근무 수당 부당 수령에 대해 경찰이 강제 수사에 나섰다.

27일 전남경찰청에 따르면 여수경찰은 이날 여수시청 감사 담당 부서에 수사관들을 보내 공전자 기록 위장 등 혐의의 수사와 관련한 압수 영장을 집행했다.

여수시는 최근 몇 년간 감사 내용 중 초과근무

수당 부당 수령 지적 사항을 정리해 경찰에 제출하기로 했다.

이번 수사는 2022-2023년 여수시 자체 감사에서 근무 시간을 허위로 입력해 수당을 챙긴 사실이 적발된 16명에 대한 민원인의 고발로 시작했다.

경찰은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했으나 여수시는 피고발인이나 혐의가 특정되지 않아 자료의 범위

가 막연하다며 제출을 꺼려 갈등 양상을 보이기도 했다.

전산 등을 통한 초과근무 부당 수령 행위에 적용되는 공전자기록 위장은 벌금형 없이 징역형만 있는 범죄로 유죄 인정될 경우 당연 퇴직 사유에 해당해 공무원들에게는 치명적이다.

경찰은 자료를 제출받는 대로 해당 공무원을 소환해 위법성을 가릴 방침이다.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여수=김창화 기자 chkim@kwangju.co.kr

“시를 꽃처럼 피워 주변을 시꽃으로 밝히고 싶습니다.”

사람 때문에 힘들고 사람 때문에 상처 받아도 시가 만나야 할 궁극적인 대상은 사람입니다.

조선의 시인 문예지 '시꽃피다' 창간



조선의 시인

농민신문신춘문예 당선, 기독교신문에 당선, '미션21' 신춘문예에 당선,

상상인 작품상, 송문문학상, 김만중문학상, 거제문학상, 신석정충북문학상 등 수상.

'아직 도달하지 않은 입의 문장', '빛을 소환하다', '꽃 향기의 밀서', '꽃으로 오는 소리' 등 발간.

〈시꽃피다〉 광주 시장창 강사, 〈시꽃피다〉 전북지역 시장창 강사, 서울 성동구 평생교육원 시장창 강사, 담양문화원 시쓰기 강사

